



아시아리뷰
제15권 제2호(통권 34호), 2025

자유 주제

www.kci.go.kr

아시아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분석*

서문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오늘날 아시아 지역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역동적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 틀이 마련되지 못한 채 매우 논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과 행복의 함수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전반부에서는 세계화의 역사적 단계에 따른 발전의 위기와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발전 개념의 시기별 변천사와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발전연구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후반부에서는 아시아 발전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발전 동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혼합 방법론 모델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국가 간 횡단분석 결과는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기반한 균형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근접분석 결과에서는 정책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사회 신뢰가 높고 정책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높은 행복 수준을 보여준다. 퍼지 셋 질적 비교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5개 유형에서 국가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원인 조합의 빈도 면에서 경제성장,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의 순서로 구성된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관한 발전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구성원의 삶의 질에 관한 발전모형을 통해 다국적화된 자본의 무한 질주를 조정하고 다원화된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주제어 아시아, 사회 발전, 세계화, 삶의 질, 혼합 방법론, 지속가능성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Robert Marsh, Dietrich Rueschemeyer, 정재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자료수집과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차명진 조교에게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 mgsuh@ssu.ac.kr

I. 문제 제기

인류 역사에서 생산성 증대에 의한 풍요로운 삶의 추구는 사회 발전의 공통적인 목표이자 희망이다. 이러한 희망은 역사적 조건과 복합적인 성격에 의해 주어진 사회의 현실적인 결과이자 미래를 향한 근원적인 자산이 된다. 다만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삶의 조건과 기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지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 서처럼 이론적 지체를 수반하게 된다. 그럼에도 발전에 관한 이론적 지형은 성장과 재구성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같은 발전의 전통적인 개념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폭증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국가의 궁극적인 발전 목표인 삶의 질의 실제적인 차원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은 근대화 및 산업화과정을 통해 세계 경제체제의 함수관계에서 구조적 위치를 찾아야 하며, 선진국은 글로벌 환경에서 파생된 국가 위기와 효율성의 문제 등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은 세계화 과정을 통해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개발도상국은 이 그림을 향해서 노력해 왔지만, 발전의 목표를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서구사회에 대한 강한 선호도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틀의 계승과 해체를 둘러싼 정책적 판단에서 종종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한다.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 분배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갈등의 분출과 해결의 어려움은 발전을 향한 국가적 노력에 편차를 가져다준다. 반면에 선발 주자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해 왔던 근대화 과정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후발 주자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5%로 2023년 4.3%에 이어 개선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유럽과 북미를 앞지르고 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 아시아의 신흥 개발도상국의 부상은 세계화 과정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무역과 투자 및 경제통합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의 침체와 여타 신흥국의 부진한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중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초래하여 국제지형에서 발전경로의 중요성과 함께 서구 중심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쟁점은 삶의 질에 관한 논의로 수렴되며, 사회 발전의 양적 및 질적 측면과 객관 및 주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하는 통합적 관점이 유용하다. 셋째,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모델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논리와 역사적인 맥락은 과거로부터의 계승과 미래로의 탐험이라는 발전의 고유한 명제에 대하여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경제성장으로 변화된 사회현실 속에서 발전의 성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접근법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사회변화가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쇠퇴와 해체를 거쳐 자본주의 경제질서 안에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은 발전 과정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지만, 발전의 성격을 둘러싼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화 과정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의미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전의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속성을 배태하고 있기에 발전의 갈림길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Wade, 2018).

발전연구에서 국가에 대한 성찰은 발전의 주체를 종속변수로 접근하는 지적 전통에 반해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시할 수가 있다. 국가는 단일한 정체성을 갖기보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공공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발전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규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집단의 협상력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갖는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회 발전은 좌절되기 쉬우며, 역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발전의 목표에 공감하고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은 높아진다. 사회 발전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성장의 열매는 국가정책의 결과이자 사회 구성

원의 반응으로서 삶의 기회에 관한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난다(Midgley, 2014). 그렇다면,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국제지형에서 볼 때, 경제적 수준이 행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의 작은 국가인 부탄은 가난하고 정적이지만 환경과 문화를 중시하고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반면에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10명의 아동 중 1명은 굶주리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내찬, 2012). 한국은 대외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관한 성공 사례로 인용되지만, 삶의 기회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압축적 발전 과정에 대한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서문기, 2015).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성장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며 정치대립, 경제위기, 사회갈등, 문화 지체, 위험사고, 환경오염 등 제반 영역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이는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행복의 차원을 포용하고 삶의 질 중심의 국가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질적인 충족이 사회적인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은 삶의 질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쟁으로 연결이 된다(Nussbaum and Sen, 1993). 실제로 삶의 질 편차는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경제성장이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이나 삶의 질 문제와 연결되어 구성원의 정책에 대한 불평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초래함으로써 이른바 성장의 역설(paradox of growth)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 발전은 주어진 사회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집합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발견적(heuristic) 범주로서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급속히 성장한 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과 행복의 함수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전반부에서는 세계

화의 역사적 단계에 따른 발전의 위기와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발전 개념의 시기별 변천사와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발전연구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후반부에서는 아시아의 발전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발전의 동인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사회 발전에 관한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시아의 특수성과 세계화의 보편성을 함께 반영하는 분석 틀은 글로벌 패러독스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확산하고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세계화와 발전 이론

현대사회에서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 과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지형과 시장의 힘은 국가의 역할과 발전의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 따라잡기로 묘사되는 발전의 목표는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바람직한 미래가 될 수 없으며 발전 과정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기도 하다(Chang, 2006; Suh, 1998; 김태균, 2016). 서구의 근대성 개념은 생태학적·기술적·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주어진 사회의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왜곡된 발전 과정을 놓치고 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은 기대한 만큼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상층 구조로의 진입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발전 이론의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방향성은 각국 현실의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발전 이론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경제성장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동안 발전의 중심축으로 이해되는 주류적 관점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 과정에 따른 발전의 위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ok, 2011; Inglehart and Welzel, 2010). 실제로 발전의 위기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단선적이고 편중된 접근과 이에 따른 정책 실패도 포함된다. 위기 자체는 발전의 본원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며 발전 과정에서 전개되는 국가정책의 효율성과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반응이 중심축을 이룬다. 곧 발전의 위기에 대한 문

제의식은 발전의 개념 속에 용해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외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전은 매우 다양한 가치를 함의한다. 발전의 전통적 개념은 제국주의 및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다. 발전의 목표는 경제성장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변혁 과정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을 강조하는 발전 이론의 주류적 관점은 저발전 또는 중속적 발전이라고 하는 왜곡된 발전 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결과 서구형 수렴모델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이론적 진영이 형성된다(Cardoso and Campodónico, 2017; Evans and Sewell, 2013). 이후 발전 이론은 인구, 기후, 환경 문제 등 인본주의에 기반하여 글로벌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권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미래 발전의 방향성과 쟁점에 관한 논의에 이르고 있다(Estoque and Wu, 2024; Goralski and Tan, 2020).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생산력의 변화 단계에서 급속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한 세계화 과정과 발전의 개념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유관 적합성을 갖는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화가 태동하면서 경제적 근대화 과정이 급속하

표 1 세계화 과정과 발전의 개념 틀

시기	성장	위기	과정	범주
1750 -	산업	노동	근대화	경제
1870 -	제국	식민	서구화	정치
1920 -	자본	사회	이념화	냉전
1960 -	성장	저성장	분업화	열전
1970 -	분배	불평등	구조화	사회
1980 -	복지	비용	민주화	NPOs
1990 -	환경	개발	반세계화	NGOs
2000 -	정보	통제	공간화	NVOs
2020 -	과학	윤리	탈세계화	문화

출처: 필자 작성

계 진행되었다. 산업혁명은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자본축적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같은 본원적 한계를 내포하게 되었다. 아울러 봉건제 잔재에 대한 부르주아 투쟁 속에서 ‘발전’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화 과정은 급속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기존의 정치·경제적 틀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 체제의 근대적 형태는 19세기 제국 및 식민주의 시기부터 등장하였으며, 세계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전’이라는 개념은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게 된다. 유럽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발전’은 ‘서구화’로 수렴되었고, 세계화의 초점은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제국의 식민지 지배가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부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에 의한 냉전 시기가 도래하고, 신식민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1955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연대인 29개국 반동회의를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에 의한 저발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성장과 분배 문제가 발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975년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제기된 생태학적 위기를 계기로 발전의 개념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중심으로 삶의 질, 복지, 환경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발전의 주체도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자발적 시민결사체(Voluntary Civic Associations) 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발전 개념이 이념을 통해 매개되는 시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의 우월성을 기초로 하는 신국제질서로 대체되면서 본격적인 국가경쟁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최근에는 공동 생산과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신국제분업체계가 형성되면서 세계화 및 탈세계화 과정과 서구화 모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발전 이론의 기본 축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를 통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자원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향한 각국의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면서 체제의 저성장, 불평등, 비용 분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조홍식, 2020). 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은 갈등 구도를 형성하여

발전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지구공동체와의 공존을 포함한 대안 모델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산성의 다각화와 사회경제적 다원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기술 통제 및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지향하여 기존의 수직적이고 비대칭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혁신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세계화에 따른 역동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발전연구의 주요 딜레마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적 토대와 갈등을 반영하며,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과학적 지식의 창출과 이행 과정이 대단히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발전의 방향성을 놓고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론적 유용성에 관한 논의도 재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발전의 영역이 주어진 사회의 자원과 가치에 관한 총체적인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모델과 핵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요 담론의 이론적 유산과 상호작용에 따른 갈등과 쟁점에 관한 학문적 성찰이 요구된다.

발전의 개념은 본래 사회는 진화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구성원은 이를 증진해야 한다는 인식론적 변화에서 출발한다(Inkeles, 1993).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원리에 의해 진화론적 속성을 배태하듯이 사회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단계를 지향하면서 발전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시지푸스(Sisyphus) 신화에 서처럼 어렵고도 끝이 없는 여정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생존 조건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과 개선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원조보다 건강, 복지, 교육 등 삶의 질에 대한 연계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연구의 중심축을 차지해 온 자유주의적 시각의 이론

적 뿌리는 진화론과 기능주의에 두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체계의 각 요소는 항상성의 균형(homeostatic equilibrium) 체계에 의해 상호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다만 서구사회의 모습인 개발도상국의 미래라는 시각은 아시아를 비롯하여 비서구의 전통적인 부문을 사회 발전의 저해가 되는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정당화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임혜란, 2018).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도 발전의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 그 미래도 단일 방향으로 수렴하기에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별 편차와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발전 과정의 복잡성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급진주의 시각의 등장은 발전연구의 이론적 확장성을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의 상호작용은 발전의 동인을 둘러싸고 근대와 전통의 양립 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에 의한 배타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게 한다(So, 1990). 초기 이론에서 서구의 근대성이 개발도상국의 전통을 어떻게 대체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기에서는 근대성의 유관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전통이 어떻게 발전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론적 자원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은 불가피하게 긴장 관계를 표출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내적인 요소인 전통과 근대의 혼종성 또는 외적 변인인 서구와의 공존성 등을 포함한다.

발전연구의 이론적 함의에 대한 성찰은 왜 발전모델로서 성공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발전의 밑그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다. 발전의 개념 틀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발전연구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이론적 갈등을 수반한다.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의 문제나 주장에 대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 유용하다. 둘째, 발전 이론의 역사적·거시적 틀에 의한 논의 방식은 비판적 고찰을 통해 구조적·미시적 틀에 의한 쟁점으로 분석의 깊이를 더해 감으로써 발전 기제에 관한 본질적인 특성을

다르게 된다. 셋째, 발전의 작동 기제에 관한 설명 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명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적인 분석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어진 사회에서 특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나 문화적 가치체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개념과 목표가 달라진다. 다섯째, 사회 환경의 개선 방향이나 변동의 속도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요구에 기반한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은 발전 동력의 핵심 요소로 미래 청사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III. 글로벌 패러독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이 주목된다. 한국·중국·일본·아세안(ASEAN) 10개국과 인도를 합친 최근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35%로 서구를 앞서고 있다. 아시아의 203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9조 1,840억 달러로 북미와 유럽 17개국의 30조 1,562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204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 GDP의 50%와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IMF, 2024).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년 전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지역으로 국내총생산은 세계 경제의 23.5%로 미국의 22.1%보다 많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늘었는데, 유럽은 오히려 20.5%로 감소하였으며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빼면 유럽의 몫은 10%대로 내려간다. 미국이 유럽을 추월하면서 격차까지 크게 벌리는 추세이지만, 미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포함하여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며 복지제도도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경제생산량은 18조 달러로 아시아 30개국 국가를 합친 16조 5,000억 달러보다 2조 달러가 더 많다. 일본(4조 달러), 인도(3조 9,000억 달러), 한국(1조 8,000억 달러)은 각기 세계 4, 5, 12위의 경제 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4억 명의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 2,870달러인 데 비해, 나머지 아

시아 국가에서는 29억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5,583달러로 생산성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제조업과 글로벌 투자의 결과로 이미 미국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여 글로벌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력과 혁신성에 기초하여 자동차 산업과 전자제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첨단 신기술과 우수한 인적 자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혁신과 중산층 확대로 2030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2040년에는 25위권의 경제 규모가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143개 국가에 대한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지수의 상위권에는 핀란드(7.7), 덴마크(7.5), 아이슬란드(7.5)를 포함한 북극의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UN, 2024). 그런데 행복지수의 상위 국가에서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5만 4,351달러인 핀란드가 1위인 데 비해, 행복지수 7위인 노르웨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만 1,103달러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도는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한국도 압축적 성장 과정으로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1인당 국내총생산, 자유,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서 순위를 선정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6.5), 대만(6.5), 일본(6.1) 순서로 행복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의 경우는 미국(6.7), 독일(6.7), 영국(6.7), 프랑스(6.6), 러시아(5.7) 순서로 이루어진다. 핀란드가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3년간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의 행복 불평등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령 및 지역별 차이가 크고 경제 규모가 행복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에 따라 변화한 사회현실 속에서, 하나의 집합적인 계량적 잣대로 발전의 성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삶의 질 문제를 중심으로 다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이 사회 발전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어떻게 삶의 질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있다. 어떤 사회들은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높은 수준

의 삶의 질을 성취하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는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삶의 질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Kaiser and Vendrik, 2019).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더욱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둘러싼 발전의 딜레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핵심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장상철, 2013).

이와 같은 글로벌 패러독스를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전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잣대로 활용한다. 이 지수는 교육, 건강, 소득이 기회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성장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을 나타낸다.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은 크게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의 수준으로 구성되며, 경제성장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수준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대조적인 경험적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Veenhoven and Hagerty, 2006). 경제성장보다는 소득분배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사회갈등이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는 달리 삶의 질의 포화점(satiation point)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Deaton, 2008).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의 80%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2024)의 온라인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조사 대상국인 57개국의 8만 5,000명에 대한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사회 발전의 13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한다. 유엔 보고서의 행복지수는 분석모델의 독립변수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부패인식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장의 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사용한다. 소득분배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평등지수(Gini Index)를 활용하며, 정치 발전의 보편적인 측정치인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적용한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ex)로 측정하는데, 이 지수는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역할을 반영한다. 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인 시민사회의 함수관계를 가늠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일반적인 신뢰에 관한 세계가치조사의 측정자료를 사용한다(Haggard and

Kaufman, 2021; 이재열, 2014).

일반적으로 국가 간 횡단면 분석모델에서 일정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 군의 숫자가 최소화되는 것이 유용하다(양종희 외, 1993). 표집 집단은 인간개발지수 기준으로 분류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7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및 기타 지역군별로 비례 집락 표집을 통해 층화한 후, 이를 다시 다단계 체계 표집 방법(stratified multiple system sampling)을 통해 조사 대상국을 추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개발지수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층화된 각 발전 단계별 및 지역별 국가 수에 비례하여 표집 비율을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들을 객관적인 자료수집 가능성, 발전 단계별 비중, 지역별 분포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54개국을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집락별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되, 동북아시아의 경우 질적 수준에 비해 낮은 양적 비중을 반영하여 6개국 중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북한만을 제외하고, 도시국가이지만 인간개발지수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홍콩을 포함하였다. 몽골은 대체로 동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지리적 위치와 문화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이가 있어 중앙아시아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국 43개국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별 측정 지표의 세부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는 사회 발전의 최종 목표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 변수들의 최소 및 최대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포함하는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의 항목별 평균치를 보면,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행복 수준은 중간 수준을 보여준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국가정책은 중간 정도이며, 사회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종속변수인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의 변동을 독립변수인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2와 모델 3에서는 각각 30%와 10%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2 측정 지표 및 세부 내용

변수	측정 지표	세부 내용	출처
삶의 질 (객관)	인간개발지수 (HDI)	문자 해독률 및 교육 기간, 1인당 구매력, 기대수명을 토대로 국가별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	UN (2024)
삶의 질 (주관)	삶 만족도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국가별 최소 1,000명 이상)에서 10분위 척도로 측정	WVS (2024)
행복수준	행복지수	1인당 GDP,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삶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등의 6개 항목의 3년간(2022-2024) 평균 자료를 기반으로 10분위 척도로 측정	UN-SDSN (2024)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주어진 국가에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각 영역이 창출한 부가 가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백분율 척도	World Bank (2024)
소득분배	지니(Gini) 지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누적 백분율에 의한 로렌츠 곡선과 균등선에 의한 면적으로 계산되며 0-1 사이에서 분포	World Bank (2024)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치문화 등의 범주에 대한 평균치를 측정하며 0-10 사이에서 분포	EIU (2024)
국가정책	거버넌스 지수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외부 압력으로부터 정책 독립성, 정책형성 및 집행, 재정 안정성 등 거버넌스 능력을 백분율로 평가	World Bank (2024)
사회신뢰	신뢰수준	‘전체적으로 당신은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국가별 최소 1,000명 이상)에서 10분위 척도로 측정	WVS (2024)

출처: 필자 작성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모델 1, 2, 3에 걸쳐 경제성장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역U자형 곡선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발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인 쿠즈네츠 가설(Kuznets, 1955)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경험적 타당성을 보여준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일정한 임계 수준을 넘는 단계에 이르면 경제성장의 효과는 점점 감소한다(Max-Neef, 1995). 사회 발전 초기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회가 풍요롭고 물질적 부(富)로 인한 행복

표 3 기술 통계량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삶의 질(객관)	.424	.956	.747	.128
삶의 질(주관)	.446	.840	.698	.074
행복수준	1.364	7.234	5.313	1.191
경제성장	-5.7	8.0	3.005	2.769
소득분배	.264	.596	.346	.062
민주주의	.25	8.78	4.019	2.242
국가정책	.251	.664	.465	.101
사회신뢰	.046	.635	.228	.124

표 4 경제성장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 1〉 삶의 질(객관)	〈모델 2〉 삶의 질(주관)	〈모델 3〉 행복수준
상수	.765(.026)	.714(.056)	5.153(.246)
경제성장	.010(.010)	.012**(.004)	.194**(.084)
(경제성장) ²	-.003(.002)	-.001(.001)	-.022*(.012)
R ²	.063	.302**	.107*
F	1.343	4.983	2.648
N	43	26	42

주: 괄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P <.01; **P < .05; *P < .1

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다른 요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행복 수준이 경제 성장만으로는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객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효과는 한계효용의 체감에서처럼 점차로 감소하며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행복 수준은 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Easterlin, 2021). 이러한 발전의 역설은 경제성장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수준 사이의 괴리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의 국가정책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5 아시아 사회 발전모델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 1〉 삶의 질(객관)	〈모델 2〉 삶의 질(주관)	〈모델 3〉 행복수준
상수	.400(.102)	.688(.109)	2.321(1.010)
경제성장	2.415***(.000)	.013**(.005)	.093*(.046)
소득분배	.202(.258)	.043(.298)	.784(2.775)
민주주의	-.005(.007)	.002(.010)	-.008(.089)
국가정책	.598***(.197)	-.143(.263)	4.846*(2.448)
사회신뢰	-.035(.122)	.045(.155)	.962(1.444)
R^2_{adj}	.793***	.276**	.569***
F	15.325	1.528	5.288
N	43	26	42

주: 괄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P < .01; **P < .05; *P < .1

아시아 발전의 다양한 차원을 반영한 복합적이고 확장된 모델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잘 나타나 있다. 회귀식의 결정 계수(R^2) 값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객관 및 주관적 차원과 행복 수준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모델 1은 종속변수 변량의 79%를 설명하며,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2와 모델 3에서는 각각 28%와 5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 발전의 세 가지 모델에서 경제성장이 핵심 변수로 나타나며, 단측 척도의 t 검증 값을 통해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모델 1에서 여타 변수들의 조건이 같다면, 국가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01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모델 2에서는 경제성장 이외에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행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3에서는 모델 1에서와 같이 국가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은 세 가지 분석모델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객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행복에 대한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찾을 수 있다(Clark et al., 2015). 모델 1과 모델3에서 국가정책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보건 등에 관한 국가정책의 질이 객관적 삶의 조건과 행복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행복 수준에서 정책의 계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복지 영역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Van Praag and Ferrer-Carbonell, 2004).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력과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높을수록 국가의 객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의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적 차원 이외에도 정책적 차원이 중요한 요소이며, 물질적 조건 이상으로 구성원의 국가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4년 세계 거버넌스 지수가 높은 30개 선진국에서 비서구인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13위)과 일본(17위)만이 포함되어 있다(World Bank, 2024). 다만 소득분배, 민주주의, 사회 신뢰의 변수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론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지거나 다원주의, 정치 참여와 문화, 시민 자유 등을 토대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날수록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 경험적 수준에서 2024년 불평등지수가 낮은 아시아 국가는 키르기스스탄(0.264), UAE(0.264), 아제르바이잔(0.266), 시리아(0.266)이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는 대만(8.9), 일본(8.4), 한국(8.1) 등이 포함되어 있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

표 6은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에 관한 상호작용 모델의 회귀분석에 관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모델의 설명력은 각기 28%, 26%, 15%로 분포하고 있으며, 객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1과 행복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 3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에서는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의 효과를 통제한다면, 국가정책이 객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 신뢰에 따라 증가하

표 6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 1〉 삶의 질(객관)	〈모델 2〉 삶의 질(주관)	〈모델 3〉 행복수준
상수	.665(.033)	.661(.028)	4.732(.286)
경제성장	-.005(.006)	.013***(.004)	.088(.064)
국가정책*사회신뢰	.048***(.012)	-.003(.009)	4.300**(.2091)
R ²	.280***	.266**	.155**
F	7.769	4.173	3.590
N	43	26	42

주: 괄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P <.01; **P <.05; *P <.1

며, 사회 신뢰가 객관적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정책과 관련이 있다.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국가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경제성장보다는 정책의 질과 사회 신뢰의 결합이 객관적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모델 2에서는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성장이 0.01 수준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과 사회 신뢰의 결합보다 경제성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는 모델 1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가 0.05 수준에서 행복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행복 수준과 관련하여 사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이 전제 조건이며, 역으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 효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7은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관한 모델을 수형도 형식(dendrogram format)으로 분류한 집락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인 아시아 국가의 지역별 분포는 동북아시아 14%, 동남아시아 21%, 중앙아시아 28%, 서아시아 35%, 그리고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이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튀르키예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9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군과 중국에서 타지키스탄

표 7 아시아 사회 발전의 집락 분석 결과(군집 중심 최종값)

변수	I (N=9)	II (N=6)	III (N=11)
삶의 질(객관)	.714	.724	.822
삶의 질(주관)	.664	.774	.695
행복수준	4.870	5.947	5.908
경제성장	2.5	6.3	3.5
소득분배	.324	.327	.364
민주주의	2.94	2.44	6.94
국가정책	.423	.474	.565
사회신뢰	.173	.316	.249

I: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이라크,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II: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III: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에 이르는 6개 국가군,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인도까지 11개 국가군으로 크게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개별화의 오류가 나타나거나 분석상의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분류 체계 안에서도 다소 이질적인 작은 단위의 국가군이 혼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개의 국가로 구성되는 첫 번째 집락(I)은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낮으며,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사회 신뢰와 국가정책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영역은 두 번째 집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고 사회적 기반이 약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국가를 포함하는 두 번째 집락(II)은 세 집락 가운데 주관적 삶의 질과 경제성장 및 사회 신뢰가 가장 높으며, 소득분배와 국가정책은 중간 수준이지만, 민주주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처럼 여타 집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정치제도는 다소 권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11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집락(III)은 객관적 삶의 질과 소득분배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와 국가정책 면에서 세 집락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수준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매우 높

으며,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 신뢰의 수준도 여타 집락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정책의 질이 높고, 삶의 질과 행복 수준 또한 높아 북유럽 복지국가 유형에 비견할 만하다.

세 집락의 발전 유형을 비교하면, 첫 번째 집락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모두 열악한 국가들로 대부분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 미흡한 정책, 사회적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집락은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 복합적인 취약성을 보이며, 개발 초기 단계의 저성장 및 저신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집락은 성장 중심의 발전모델로 낮은 민주주의 수준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효율성과 함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높으며, 경제성장이 주관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군이다. 마지막 집락은 민주주의, 정책 효율, 사회 신뢰 기반의 균형 성장형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시아 지형에서 삶의 질과 행복에 이르는 발전경로가 단일하지 않으며 크게 세 가지 발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비록 각국의 주어진 상황과 발전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문화권 내에서 국가별 경제성장과 행복도에 관한 검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집락 분석의 결과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경제성장의 격차가 국민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객관적 삶의 조건을 향상해 왔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집락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안정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아시아 지역은 유교와 집단주의 전통을 공유하며, 가족 중심주의, 교육 중시, 성공 지향적 가치관 등에서 유사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공통된 문화적 기반 속에서 일부 국가의 빠른 성장은 그렇지 못한 다른 국가의 구성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해외 노동력 이주 등이 성

공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에서 오는 주관적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금이 높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북유럽에서는 소득 격차가 적고 사회 신뢰가 높아 사회적인 상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적으며, 이것이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Kraft and Kraft, 2023). 따라서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경제적 불균형은 단순히 물질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및 사회적 수준에서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정도는 경제성장의 절대적 수준보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사 대상을 변수 단위로 분해하여 양적 방법에 기초한 국가 간 횡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사례의 가치와 맥락에 따른 복합성과 다양성을 복원하여 질적 자료의 장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사례 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퍼지 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이 유용하다(Ragin, 2008). 중간 범위 표본 수의 분석에서 이점을 갖는 이 방법은 양적 분석의 다중공선성 문제와 자유도의 제한을 벗어나 변수의 설명력이나 조건과 결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합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변수 중심의 양적 분석과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의 장점을 계승하기 위한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 방법은 부울 대수학(Boolean algebra)의 논리적 추론 방법을 활용하여 원인 조건들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조합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둔다(서문기, 1999). 국가와 같은 연구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의 다양성에 의한 질적 차이와 정도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양적 차이를 통합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원인과 경로인 인과적 이질적인 속성(causal heterogeneity)을 파악함으로써 유형과 정도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할 수가 있다.

퍼지 셋 질적 비교분석의 접근방식은 다양성의 검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한다. 일관성(consistency)은 원인 조건이나 조합이 일관되게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도를 나타내며, 양적 분석에서 유의수준의 개념에 해당한다. 전반적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은 모든 조합이나 구성이 일관되게 높은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원인 조건의 결합을 검증하기 위한 포괄성(coverage)은 분석모델 구성이 결과의 사례를 포괄하는 정도나, 또는 여타 구성과 겹치지

않는지를 판단함으로써 회귀분석의 결정 계수와 유사한 검증 척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퍼지 셋 분석 방법은 각 사례를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의 혼합을 통해 사례별 맥락과 유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례들의 배열이 만들어 낸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과적 복합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와 같은 범주별 행렬식의 기준인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리에서처럼 논리적이고 압축적인 논증 방식으로 인과 구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Fu, 2024).

본 연구의 퍼지 셋 결합 원인 분석에서 결과 집합은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지수로 구성되며, 원인 집합은 경제성장, 소득분배, 민주주의, 국가정책, 사회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별 측정값을 퍼지 소속 점수로 변환하고 진리표 분석(truth table analysis)을 통해 결과 조건을 설명하는 원인 조건의 가능한 결합의 배열로 변환하여 필요 및 충분조건을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은 삶의 질과 행복 수준과 같은 결과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개별 요소인 원인 조건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원인 조건에 대한 일관성의 값이 0.8 이상이면, 거의 항상 일관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Park et al., 2020). 필요조건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책과 소득분배의 2개 원인 조건이 객관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표 8에서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즉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질과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제성장, 민주주의, 사회 신뢰의 3개 조건은 일관성 검증 기준인 0.8 이상의 값을 보여주지 않아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정책과 소득분배의 두 가지 필요조건이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포괄성은 최소 88% 이상과 최대 9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의 모델에서 다섯 가지의 원인 조건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합 조건인 32개(2⁵) 배열 가운데 빈도수 기준점(frequency cutoff)을 0으로 하는 원인 조건의 결합구조는 삭제하며, 일관성 기준점은 0.8로 설정하여 진리표 분석 기준으로 객관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서 각기 0.9400, 0.9250, 0.9021 이상의 경우 결과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1의 값으로 코딩되며, 이외의 값은 0으로 지정된다. 퍼지 셋 분석에 관한 통계 소프트웨어(fsQCA 4.1)를

표 8 아시아 사회 발전의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 결과(필요조건 검증)

삶의 질(객관)	긍정		부정(-)	
	포괄성	일관성	포괄성	일관성
경제성장	0.7458	0.6626	0.7888	0.6415
소득분배	0.9399	0.9422	0.9406	0.8099
민주주의	0.8878	0.7292	0.8489	0.6383
국가정책	0.9413	0.9619	0.8913	0.8338
사회신뢰	0.8502	0.7295	0.8402	0.6600

삶의 질(주관)	긍정		부정(-)	
	포괄성	일관성	포괄성	일관성
경제성장	0.7927	0.6807	0.7540	0.6356
소득분배	0.9514	0.9219	0.9571	0.9106
민주주의	0.8600	0.6827	0.8692	0.6775
국가정책	0.9116	0.9005	0.9244	0.8964
사회신뢰	0.8507	0.7055	0.8453	0.6883

행복수준	긍정		부정(-)	
	포괄성	일관성	포괄성	일관성
경제성장	0.7642	0.7233	0.7740	0.5845
소득분배	0.8887	0.9493	0.9441	0.8045
민주주의	0.8473	0.7415	0.8706	0.6078
국가정책	0.8906	0.9697	0.8900	0.7731
사회신뢰	0.8538	0.7806	0.8330	0.6075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준 분석에 따른 5개 유형의 상호작용이 도출되었으며 진리표에서 나타난 원인 조건의 결합에 관한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의 결과는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객관 및 주관적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대한 복합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각기 0.9817, 0.9879, 0.9625로 충분조건 분석 결과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3개 모델이 갖는 전체 일관성은 0.8796, 0.8555, 0.9188로 나타나 분석 결과를 다소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원인 조건의 결합에 의한 모형별 상호작용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민주주의, 국가정책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첫 번째 모델

표 9 아시아 사회 발전의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 결과(충분조건의 결합 검증)

결합 조건	삶의 질(객관)		
	포괄성	일관성	국가
~소득*~민주*~국가	.5299	.9358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파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성장*민주*국가	.5330	.9863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튀르키예
성장*소득*민주*사회	.4448	.9530	필리핀, 인도네시아, 조지아, 방글라데시
성장*국가*사회	.6319	.9669	대만, 카자흐, 몽골,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크
민주*국가*사회	.7423	.9683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전체 포괄성	.9817		solution coverage
전체 일관성	.8796		solution consistency

결합 조건	삶의 질(주관)		
	포괄성	일관성	국가
~소득*~민주*~국가	.5568	.9504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파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성장*민주*국가	.5106	.9131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튀르키예
성장*소득*민주*사회	.4739	.9814	필리핀, 인도네시아, 조지아, 방글라데시
성장*국가*사회	.6455	.9547	대만, 카자흐, 몽골,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크
민주*국가*사회	.7223	.9107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전체 포괄성	.9879		solution coverage
전체 일관성	.8555		solution consistency

결합 조건	행복수준		
	포괄성	일관성	국가
~소득*~민주*~국가	.4977	.9365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파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성장*민주*국가	.4961	.9780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튀르키예
성장*소득*민주*사회	.4271	.9749	필리핀, 인도네시아, 조지아, 방글라데시
성장*국가*사회	.6117	.9973	대만, 카자흐, 몽골,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크
민주*국가*사회	.6999	.9729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전체 포괄성	.9625		solution coverage
전체 일관성	.9188		solution consistency

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 불평등 수준이 결합조건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포괄성은 0.5299, 0.5568, 0.4977로 50%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며, 일관성은 0.9358, 0.9504, 0.9365로 높은 편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에는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파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두 번째 모델은 경제성장 속도가 느리고 민주주의와 국가정책의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 및 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성은 각기 0.5330, 0.5106, 0.4961이며, 일관성은 0.9863, 0.9131, 0.9780으로 상당히 높으며, 이 유형에는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튀르키예가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발전경로를 보여준다. 반면에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데 비해 소득 불평등이 높으며 사회 신뢰 수준은 낮은 세 번째 조합에서도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관한 유의미한 상호작용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일관성은 0.9530, 0.9814, 0.9749로 상당히 높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조지아, 방글라데시로 포괄성은 0.4448, 0.4739, 0.4271로 다소 낮은 편이다.

네 번째 모델은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은 조합이 결과 집합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의 충분조건임을 보여준다. 일관성은 0.9669, 0.9547, 0.9973으로 매우 높으며, 포괄성은 0.6319, 0.6455, 0.6177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대만,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 있다. 마지막 모델은 민주주의, 국가정책, 사회 신뢰의 수준이 갖춰질 때,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합성을 갖는 조합이다. 일관성은 0.9683, 0.9107, 0.9729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포괄성은 0.7423, 0.7223, 0.6999로 5개 모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포함되는 이 조합은 두 번째 모델의 확장성을 보여주며, 민주주의와 국가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개 유형에서 국가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원인 조합의 빈도 면에서 경제성장, 민주주의, 사회 신뢰의 순서로 구성된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정책과 사회 신뢰의 정합성이 중요하

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관한 발전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관해 국가정책과 경제성장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규명한 국가 간 횡단분석 및 집락 분석의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아시아 사회 발전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및 함의

오늘날 아시아 지역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왔던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Amin, 2006; 임현진 외, 2016). 문제는 이러한 역동적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 틀이 마련되지 못한 채 매우 논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아시아의 발전 경험을 개별적인 개념이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은 있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이론적 편향성이나 사례별 특수성에 배타적으로 매몰됨으로써 비교사회학적 관점의 유용성을 놓치고 있다.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과 각국의 발전 기제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지 않으면, 발전 경험의 편차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왔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목받던 발전 국가론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변화하는 상호 관계에 기초하여 발전모델의 유용성을 설명한다(Önis, 1991; 윤상우, 2005). 1980년대 초기에는 국가 주도모델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우위와 영향력이 강조되다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국가의 역할이 비판받으면서 시장의 우위가 새로이 확립되었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된다. 반면에 이러한 흐름은 발전 이론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성장 이론의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높은 교육열이나 공동체적인 특성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효과를 경험한 아시아 발전 과정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Nye, 2023).

이론적 지형에서 볼 때, 과거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해결 방안을 현재 상황에 더 이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방법론적으로도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보완한다면 역사적 맥락과 실증적 분석을 통합하여 이론적 일반화와 유형화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다. 아시아 각국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 또는 왜곡된 결과를 비교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발전모델은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시아 발전의 통합모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기반한 균형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상호작용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발전 과정에서 경제성장, 정책의 질, 사회적 신뢰에 따라 발전모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정치 및 사회적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이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겠다.

정책 효과가 사회 신뢰 수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은 본원적으로 국가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반응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기반 발전모델의 기본적인 가정과 부합한다. 국가정책이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원 투입이나 정책 집행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가 정책의 효과성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의 결과에서는 정책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 신뢰가 낮은 국가에서는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사회 신뢰가 높고 정책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높은 행복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발전이 단지 정책 공급자로서의 국가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퍼지 셋 질적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사회 발전의 단계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정책, 사회 신뢰의 조합은 높은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가져오며, 중진국에서는 경제성장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불평등 수준이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발전 결과는 단일한 경로가 아닌 복수의 발전 유형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각국의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발전에서 삶의 질과 행복 수준에 관한 동력은 사회 발전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어떻게 주어진 사회의 국가정책 안에서 접목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요구된다. 다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소득의 계수 효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성장의 역설은 국가별, 국가 간, 횡단 및 종단면 비교 분석에서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정 시점의 횡단면 차원과 시간 경과에 따른 시계열적 관계의 모순에 의해 성장의 역설에 관한 가설이 역설적인 것으로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부분 개발독재의 국가체제에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후 사회 발전이 가능하였다(Suh, 2007). 아시아의 공통적 경험은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 단계를 거친 뒤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대안적 경로를 가진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아시아 후발 주자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권위주의 독재가 반드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를 추진한 중동의 국가들이 다시 독재로 회귀한 경우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실패한 남미의 경험은 질적 성장과 사회문화적 토대 없이는 발전 자체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Davis, 2004).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을 포함하여 10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주로 양적 성장과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World Bank, 2024). 경제적 효율성의 피상적인 척도에 근거한 정책에 의존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발전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은 초기 단계에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특성으로 발전 효과가 왜곡되거나 구성원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산층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효

과적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일본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사례는 성장 이론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변인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체계에 의해 형성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정경유착 등 대기업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발전 동인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하는 서구의 관점과 대비된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2024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총영업이익은 41조 달러로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133개 기업을 보유하여 점유율 25.9%를 보여주는 중국은 139개 기업으로 33.6%의 점유율을 차지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Fortune, 2024). 일본이 40개 기업으로 29개의 독일과 24개의 프랑스를 여전히 앞치르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은 15개로 경제 규모보다 많은 대기업을 보유하고, 인도는 10개 기업이 선정되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시아의 제도가 부패하거나 개발독재라서 발전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개방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후발 주자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기업의 역량과 사회적 토대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었으며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통해 개방경제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서구의 발전 경로와는 다르다. 요컨대 발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과 이 자리를 채워주는 양질의 노동력이 선제적 요건이다.

세계화 과정은 아시아 국가의 미래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흐름에 의해 ‘발전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불평등에 의한 사회 양극화라면, 차별과 배제를 통한 경제성장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균열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는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총체적 부를 증가시켜 주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주요 자원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로부터 오는 취약성이 매우 크다. 거대 국제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에 지나친 무역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요구함으로써 외환 및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Stiglitz, 2024).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험은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제시해 주며 발전연구에서도 지배적인 관점의 독점보다는 복합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론적 지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어진 사회의 특정 시기와 단계에서 유포피어를 향한 지름길은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는 디스토피어를 향한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의 후발 주자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과 부딪치면서 서구가 중심축인 세계화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 세계화는 국제지형에서 국가 간의 무한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냉혹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발전 전망의 명암이 갈리고 득실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구적 불균형이 산업, 무역, 금융뿐만 아니라 계층,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적 세계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요구된다. 발전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이 선행하고 시민사회가 후행하는 경로가 일반적인 흐름이더라도 발전 주체와 객체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전 연구의 과제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구성원의 삶의 질에 관한 발전모형을 통해 다국적화된 자본의 무한 질주를 조정하고 다원화된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 지형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발전경로와 전략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표본을 확보하여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 발전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하지만, 주어진 사회의 발전이행기에서는 불가피하게 편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질적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투고일: 2024년 1월 17일 | 심사일: 2025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김태균. 2016.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사회』 109: 229-261.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_____. 1999.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확장.” 『한국사회과학』 21(2/3): 199-223.
- 양종희·이수훈·유석춘. 1993.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 파주: 나남.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파주: 나남.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이재열. 2014.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임현진·서문기·윤상우. 2016.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란. 2018.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상철. 2013. “사회발전이론과 사회의 질 기획.” 『사회와이론』 22(22): 175-205.
- 조홍식. 2020. 『자본주의 문명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Acemoglu, D. and J. Robinson. 2013.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Y: Crown.
- Amin, S. 2006. *Beyond US Hegemony: Assessing the Prospects for a Multipolar World*. NY: Zed Books.
- Bok, D. 2011.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rdoso, F. and H. Campodónico. 2017. “The Future of Latin America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9: 16-22.
- Chang, H. 2006.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NY: Zed Books.
- Clark, A., S. Flèche, and C. Senik. 2015. “Economic Growth Evens Out Happiness: Evidence from Six Survey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2(3): 405-419.
- Davis, D. 2004. *Discipline and Development: Middle Class and Prosperity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Easterlin, R. 2021. *An Economist's Lessons on Happiness: Farewell Dismal Science*. London: Springer.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 *Democracy Index 2024*. London: EIU.
- Estoque, R. and J. Wu. 2024. “The Resilience-Sustainability-Quality of Life Nexu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912, 169526.
- Evans, P. and W. Sewell. 2013. “The Neoliberal Era: Ideology, Policy, and Social Effects.” In P. Hall and M. Lamont, eds. *Social Resilience in the Neo-Liberal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tune. 2024. *Fortune Global 500*. <https://fortune.com/ranking/fortune500/2024/>
- Fu, M. 2024. “scpQCA: Enhancing mvQCA Applications through Set-Covering-Based QCA Method.” *Arxiv. Stat.* <https://arxiv.org/abs/2410.20208>.
- Goralski, M. and T. Tan.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8(1), 100330.
- Haggard, S. and R. Kaufman. 2021. *Backsliding: Democratic Regress in the Contemporary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and C. Welzel. 2010. “Changing Mass Priorities: The Link between Modernization and Democracy.” *Perspectives on Politics* 8(2): 551-567.
-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1-2): 1-2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 C.: IMF.
- Kaiser, F. and M. Vendrik. 2019. “Different Versions of the Easterlin Paradox: New Evidence for European Countries.” In M. Rojas, ed. *The Economics of Happiness*. London: Springer.
- Kraft, P. and B. Kraft. 2023. “The Income-Happiness Nexus: Uncovering the Importance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Subjective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83601.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Max-Neef, M. 1995.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A Threshold Hypothesis.” *Ecological Economics* 15(2): 115-118.

- Midgley, J. 2014. *Social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 Nussbaum, M. and A. Sen.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2023. *Soft Power and Great-Power Competition: Shifting Sands i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ondon: Springer.
- Önis, Z.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s." *Comparative Politics* 24(3): 109-126.
- Park, Y., P. Fiss, and O. Sawy. 2020. "Theorizing the Multiplicity of Digital Phenomena: The Ecology of Configurations, Causal Recipes, and Guidelines for Applying QCA."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 44(4): 1493-1520.
- Ragin,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 A. 1990.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System Theories*. London: Sage.
- Stiglitz, J. 2024. *The Road to Freedom: Economics and the Good Society*. NY: W.W. Norton & Company.
- Suh, M. 2007.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38(3): 387-406.
- _____. 1998.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From the State-sponsored to the Quest of Quality of Life*. NY: Praeger.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erlin: TI.
- United Nations. 2024. *World Happiness Report 24*. Oxford: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 Van Praag, B. and A. Ferrer-Carbonell. 2004. *Happiness Quantified: A Satisfaction Calculus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 and M. Hagerty,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436.
- Wade, R. 2018. "The Developmental State: Dead or Alive?" *Development and Change* 49(2): 518-546.
- World Bank. 20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4*.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Values Survey. 2024. *Online Data Analysis*. <http://www.worldvaluessurvey.org>(검색일: 2024. 8. 15.).

Abstract

Developmental Pathway in Asia: Towards Sustainability Transitions

Moon-Gi Suh Soongsil University

The developmental pathway in Asia show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ccurring at an unprecedented rate eve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us bringing about great changes to the Western-centered global order. The problem is that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prehensively explains this dynamic process has not been established, with the topic remaining at a very controversial level.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ogic of globalization and the meaning of development while also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the ultimate goals of development, based on the experience of Asia.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the dynamic processes of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tages of globalization are explored,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research are derived by comparing liberal and radical perspectives. In the second half, combined models are presented to diagnose the sustainability of Asian development, and 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drivers are empirically testified by mixed methods.

The results of a cross-national analysis indicate that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al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both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 cluster analysis illustrates that countries with high policy levels but low social trust

have relatively low levels of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while countries with high social trust and policy levels maintain a high level of happiness. As shown in the results of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governmental policy is the most critical factor and the frequencies of causal combinations underline the potential leverage of economic growth, democracy, and social trust. At a high economic level, mutual 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al policy and social trust is important, and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strengthen their developmental strategies with regard to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are not conducted to focus on the speed of economic growth but to concentrate on a development pathway that concerns the quality of life, adjusting the infinite rush to multinational capital and establishing a social base for the democratic operation of a pluralistic community.

Keywords | Asia, Developmental Pathway, Global Paradox, Mixed Method, Sustainability

